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51호(99/3/25)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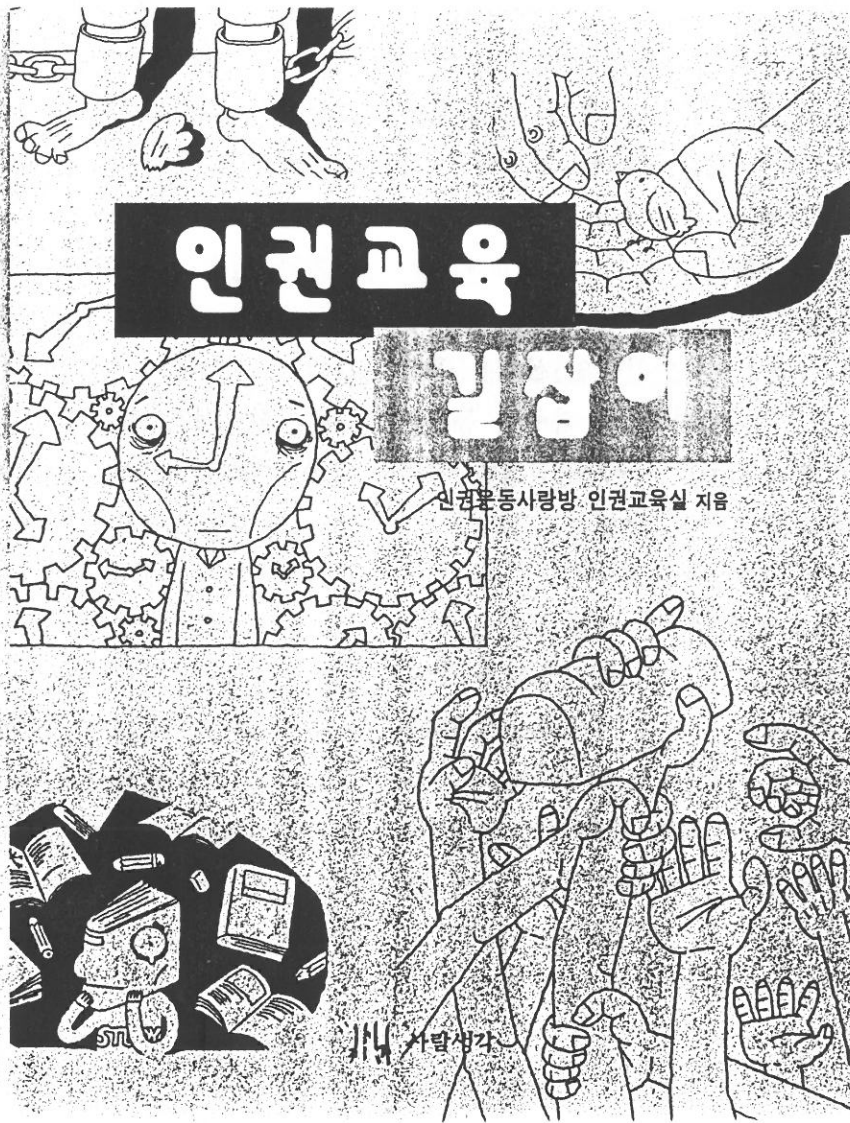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인 권 교 육

인 권 운 동 사 랑 방 인 권 교 육 실 지 음

사 랑 생 각



## 인권교육

##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

사 랑 생 각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

# 사 / 업 / 보 / 고

(99년 2월 넷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

## 중대한 기로 국가인권위원회

### 공추위, 당정협의 결과 철회 촉구

한달 전만 해도 법무부안이 폐기되어 중대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 3월 22일 밤 당정협의에서 난 결론이 민간단체가 주장하던 바와는 사뭇 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법인의 위상을 갖지만 국가기구의 성격을 갖는 인권위 설립을 목표로 법안을 수정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공추위 대표단은 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원길 전 정책위원장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을 만나 공론화시킬 것을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추위와의 약속 직후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과 정책위원장의 경질이라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추위는 신임 정책위원장을 만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고, 이런 공백기를 이용해 법무부는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서 결국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추위는 긴급히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 입법추진과정과 최종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공추위 대표단은 당정협의 결과의 철회를 촉구했습니

다. 특히 공추위는 국가인권위 설치 주도권이 또다시 법무부에 넘어간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공추위는 26일 국민회의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밀실타협에 대한 비판과 철회를 촉구하면서 민간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추위는 유엔인권위와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에 긴급의견서를 발송, 한국에서의 인권위 설치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로성명서와 대통령 면담등을 추진키로 했고, 이를 위해 공추위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원로 초청 설명회를 30일 낮 12시에 세실레스토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인권기구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추위로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당정협의안대로 국가인권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 국보철 대학생 실천단 구성 간담회

지난 1월 구성되어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다짐했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위한 연대회의는 3월 4일 간담회를 경과하면서 사안별 공투체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각 단체들의 인식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철폐만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99년 현재 정세에세 어떻게 철폐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7조 삭제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의

건은 현실적인 안이지만, 원칙을 폐기하는 개량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은 자체 내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론과 폐지론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7조 삭제 목표를 고려하고, 10년만에 국가보안법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폐지론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중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캠페인팀은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운용 사례집'을 준비 4월 중에 선별 예정이며, 국보법 철폐를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오는 4월 9일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주영(사랑방), 장경주(민변) 씨를 파견했으며, 4월 초 조시현 교수를 보내 유엔인권위에서 국보법 문제를 국제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학생실천단은 서울 시내 7개 학교 단위(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의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계획을 수립하는 간담회를 24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후 전개될 국가보안법 논의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국가보안법 7조 자료집을 3월말까지 내용을 완성하고, 4월중순경 미뤄놓았던 '(가제) 생활 속의 국가보안법' 책자와 동시에 사람생각에서 출판할 계획입니다.

## 불심검문 캠페인도 출발 준비

불심검문 캠페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불심검문 캠페인은 지난해와는 달리 각 대학별 캠페인팀을 만들고 사랑방은 이들을 연결해주고, 조정·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의 캠페인이 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각 학교의 주체가 바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운동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대학의 주체를 바로 세워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들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의 불심검문 사업을 논의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자'란 구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부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게 됩니다. 또, 즉각적인 피해사례 확보와 대대적인 법률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불법검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자유권위, 보안관찰법·행형 사업도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사업외에도 감옥의 인권 관련 사업과 보안관찰법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김동한 박사님의 지도로 헌법 관련 세미나를 매주 회의 시간 때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형법개정팀은 지난 12일 모임을 가졌고, 행형법 민간단체 초안 논의하고 있으며, 4월 9일 모임에서 민간 개정안을 성안하게 됩니다. 이후 행형법개정팀은 행형법 연구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자체적으로 (가칭) '감옥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감옥 인권문제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랑방에서는 감옥과 관련하여 청송 보호감호소 관련 사건을 비롯해 교도소내 폭행 또는 교도소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교도소에서 사망한 배재문씨 사건의 경우에는 오는 29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주교사제단, 민변 등과 함께 전주교도소를 방문, 진상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안관찰법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5일 3월 중에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8명을 모아서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동대응 방안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관찰법 철폐 투쟁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박지현, 김삼석, 안윤정, 전북의 인권운동 젊은 연대 등과 함께 법폐지 투쟁 전개를 공동으로 모색 중입니다.

### 교육 관련 연대사업 활발히 진행

인권교육실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과 활발하게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학정상화공대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사립학교 해직교사 부분은 8월 정도까지 해결될 전망입니다. 공대위는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민주화 과제를 논의하는 연대틀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학교 교육 내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 단위에서 하기로 하였고,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사랑방, 중고등학생복지회 등 10여개 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체벌법제화 저지 공대위는 체벌 법제화

저지와 학생인권예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와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형성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성명서를 조직 중이고, 4월 3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0여명의 청소년 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연대는 앞으로 청소년 관련 법, 정책, 인권실태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청소년 인권관련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으며, 유엔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보고서를 준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인권영화제, <칠레전투> 배급권 확보

3회 인권영화제에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칠레전투>의 배급권을 교섭 4개월만에 드디어 확보했습니다. 조건으로는 3년 동안 텔레비전 판권까지 인정하는 것이며, 분기마다 한번씩 정산하여 리포트를 보내고, 수입의 절반씩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초에 배급 기념 상영회를 가질 예정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배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가 발간되어 여러분께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하루소식>도 테두리선을 없앴고, 제목 글자체와 고정란 제호 글씨 등을 바꾸는 부분적인 지면개선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평 필진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번 시평 필진으로는 서준식 대표, 정연순 변

호사, 이경주 경북대 법학과 교수, 이성훈 파스로나 사무총장, 채만수 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이번 시평팀은 8월까지 격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아울러 사랑방 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독자확대를 위해 사무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 몫을 할당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소식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마을 퇴소자들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양지마을 퇴소자들의 소송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24일 현재 17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추가형사 고소,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가협이 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 지 140여일이 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여의도의 유가협 농성장을 찾아가 하룻밤을 유가협 부모님과 지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담소도 나누고, 아침에는 국회 앞에서 피켓팅도 함께 했습니다.

□ 서대표님이 최근 부쩍 늘어난 강연 일정으로 그렇잖아도 바쁜 일정을 더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3월 들어서도 7일 천도빈, 17일 서울대, 18일 경북 영덕, 24일 광주에서 인권과 국가보안법 등을 강연하셨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장기수가축협의회에 함께 일했던 양재모씨의 주례도 맡았습니다.

□ 사무국장은 2월 26일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사회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평가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 인권교육실장 배경내씨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인권학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유점렬씨가 3월부터 연수중입니다. 유점렬씨는 엄주현씨와 부부이고, 지난해 뉴질랜드를 다녀온 뒤 사랑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중인 연수생은 현재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연수를 마치는 5월이면 상임활동가가 1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이주영씨가 제네바에 안착하여 바쁘게 유엔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하면서 <인권하루소식>에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무국과 자원활동가모임인 인사동은 27일 북한산장으로 봄 MT를 떠납니다. 이번 MT에서는 정대화 교수를 초빙, 현 정세에 대한 강연을 듣고, 올해의 종합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24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법연이 사무실 보증금으로 걸어놓았던 1천만을 빼주기 위해 다시 급히 1천만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 컴퓨터, 책장, 회의용 의자 등을 급히 찾습니다. 일할 사람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컴퓨터, 민주법연이 이사하면서 모자라게 된 회의용 의자, 자료를 비치하기 위한 책장 등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면 좋겠지만, 재정부담이 커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도 중고 사무집기 등을 모아 사용하여 왔고, 새로 사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 길잡이』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비롯해 사랑방에서 나온 책들을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료>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추위 긴급성명

\* 이 성명은 22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 1

어제(22일) 밤,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적 성격을 갖는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로 설치"한다는 것이 이 합의의 골자이다. 일견 법무부의 양보요 민간단체들과 법무부 사이의 타협의 산물처럼 보이는 이 합의 내용은 그러나 결코 양보도 타협도 아닌,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법무부의 끈질긴 방해공작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우리의 참담한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온 장본인은 바로 법무부로 대표되는 검찰세력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담아 세워질 뜻깊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과거와의 단절을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는 당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중요한 당사자로서 버젓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도덕한 술수와 꾀변을 동원해가며 이 논의를 좌지우지해왔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준)헌법기구이다. 따라서 이는 (준)헌법기구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 점에 있어 우리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야말로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믿는다. 놀랍게도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으며, 때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해공작을 일삼아왔던 것이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법무부의 이와같은 목표가 대체로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법무부 안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바에 따라 법무부 안이 사실상 용도폐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민회의 쪽에서 국가인권위 설립논의를 이끌었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공백'을 틈타 법무부가 기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킨 것이 바로 이번 당정협의의 결과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당정협의의 결과는 결코 아름다운 양보도 현명한 타협도 아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법무부의 야욕이 복병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으며, 법무부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나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 2

이리하여 과거 인권침해의 대표주자였던 법무부는 새 시대에 우리의 희망을 담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밀실정치'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모든 중요한 정책은 널리 국민에게 홍보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수없이 쌓아올림으로써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그 성격상 과감하게 공론에 부쳐지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논의가 무르익었어야 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누누이 정치권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는 철저히 공개를 거부한 정부 여당과 법무부 사이의 밀실협상으로 전개되었다.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으며, 법무부도 초기에 한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 그 엄청난 조직력과 정력을 오로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음성적인 로비활동에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아니 모든 신경을 이 문제에 집중시켰던 민간 인권단체들조차도 당정협의에서의 논의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월 2일에 이기문 인권위원장으로부터, 그리고 10일에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공론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완벽하게 물거품으로 변해버렸다. 장영철 신임 정책위 의장은 우리의 수차례 걸친 면담 요청을 묵살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최종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법무부와 밀실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도둑의 파탄지경에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런 폐쇄적이고도 고압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억울한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정치권력의 밀실협의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유로운" 기구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 3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소와 체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간여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어두운 우리 현대사를 분별을 가지고 살아온 국민이라면 법무부를 결코 '인권의 수호자'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당정협의에서의 '최종합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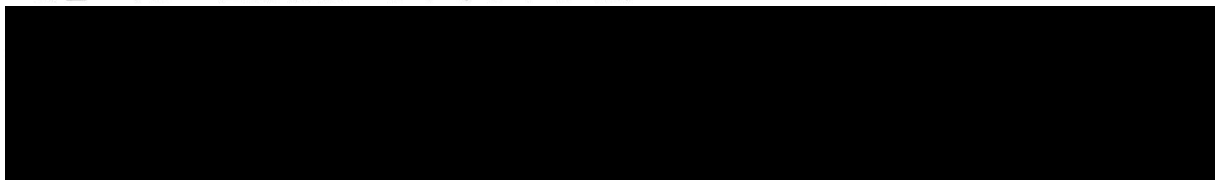
우리는 3월 22일 당정협의 결과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논의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99년 2월 재정보고**  
(99년 2월 16일 - 3월 15일)

전기이월: -1,160,416 원

수 입		지 출	
회비	1,568,100	활동비	3,770,000
구독료	3,740,700	발송비	521,600
사업수익	1,517,920	사무비품비	213,680
- 자료 복사·판매	601,420	사무실유지비	1,241,860
- 강연·교육·원고	450,000	간행물구독료	120,000
- 인권시평 배급료	120,000	통신·전화비	880,270
- 합본 11호 판매	90,000	사무기기 구입비	235,000
-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234,000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378,400
- 한국감옥의 현실 판매	22,500	복사비	632,000
차용	10,000,000	지로인쇄비	120,000
기타	261,332	식비	368,940
		출장비	31,400
		민주법연 보증금 반환	10,000,000
		기타	235,400
<b>수입총액:</b>	<b>17,088,052원</b>	<b>지출총액:</b>	<b>18,748,550원</b>
<b>최종결산:</b>	<b>-12,820,914원</b>		

<2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 적자 폭이 다시 커지니 총무의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동안 밀린 회비 분납/완납 부탁드립니다.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이사를 하느라고, 사무실 보증금 1천만을 급히 마련하느라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